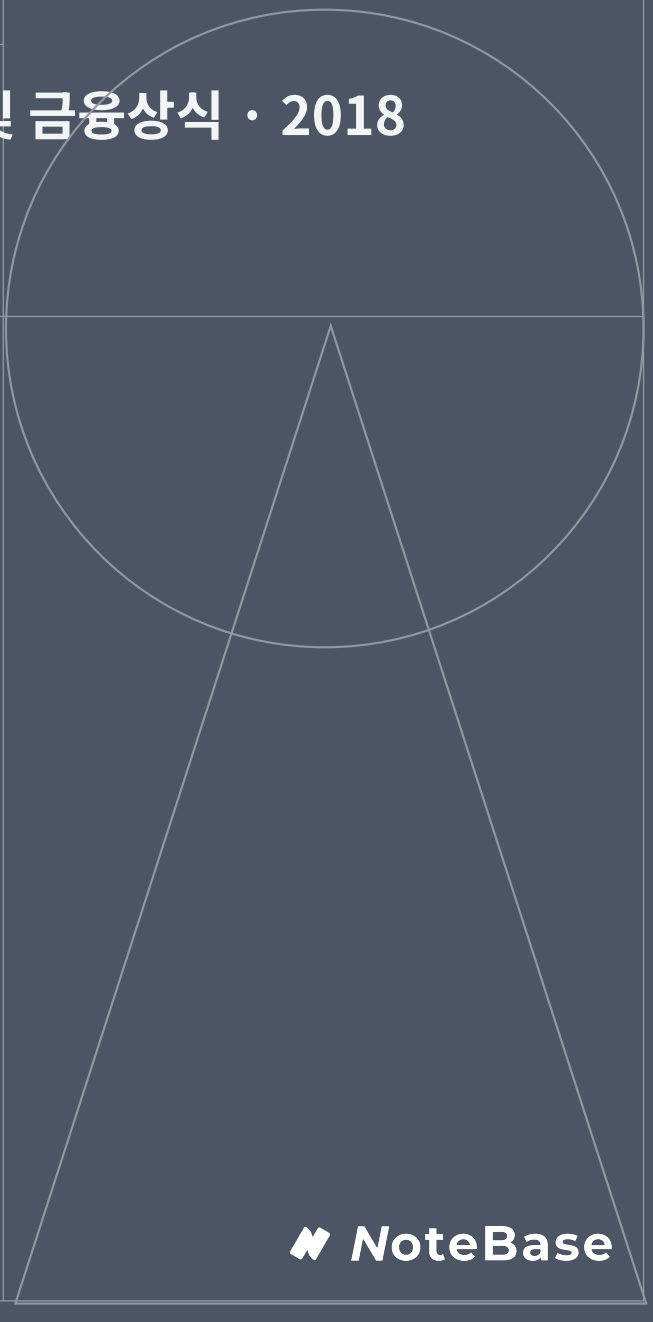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8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 및 금융상식 · 2018

문 1.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법상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부과 면제와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우편물에 대한 우편관서의 압류거부권이 인정되는 시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압류거부권 = 법정 요건을 충족한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손(海損) = 해상 운송 중 선박이나 화물에 생긴 손해 또는 그 손해에 따른 공동 부담을 말한다.

핵심 구분

우편법 제7조에 따라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우편 전용 물건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우편법 제8조의 우편물 압류거부권은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인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우편법 제7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O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우편법 제7조에 따라 해손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옳다.

③ O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다.

④ X
우편관서가 우편물의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때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이다.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에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올바른 표현: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우편물의 압류거부권을 혼동하게 한다. 전용 물건은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우편물에 대한 우편관서의 압류거부권은 '운송 중' 또는 '발송 준비 완료 후'라는 시점 요건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상이 '우편 전용 물건'인지 '우편물'인지 먼저 구분한다. 우편 전용 물건이면 압류 금지·세금 및 공과금 면제를, 우편물이면 압류거부권의 시점인 '운송 중 또는 발송 준비 완료 후'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전용 물건은 압류 금지·부과 면제, 우편물 압류거부는 운송 중 또는 발송 준비 완료 후이다.

NoteBase

문 2. 우편사업이 제공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량이 800g인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② 중량이 25kg인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

③ 중량이 20g인 서신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하는 경우

④ 중량이 2kg인 의류를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경우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와 선택적 우편역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중량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보편적 우편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이고, 선택적 우편역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밖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제15조의 중량 기준에 따르면 통상우편물은 2*kg*을 초과할 때, 소포우편물은 20*kg*을 초과할 때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25*kg*인 쌀자루는 소포우편물의 기준 중량을 초과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800*g*인 서류는 통상우편물의 2*kg*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량 기준상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이 아니다.
- 틀린 표현: 중량이 800*g*인 서류
- 올바른 표현: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② O
- 25*kg*인 쌀자루는 소포우편물의 20*kg* 기준을 초과하므로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③ X
- 20*g*인 서신은 통상우편물의 2*kg*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은 별도의 특수취급 방식이므로 이 문항에서 묻는 중량 초과 사례와 구별한다.
- 틀린 표현: 중량이 20*g*인 서신
- 올바른 표현: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④ X
- 2*kg*인 의류는 소포우편물의 20*kg*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배달증명은 별도의 특수취급 방식이므로 이 문항에서 묻는 중량 초과 사례와 구별한다.
- 틀린 표현: 중량이 2*kg*인 의류
- 올바른 표현: 중량이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오답 포인트

통상우편물의 기준인 2*kg*과 소포우편물의 기준인 20*kg*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③의 내용증명과 ④의 배달증명이라는 특수취급 명칭에 끌려 중량 기준을 놓치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품이 통상우편물인지 소포우편물인지 구분한 뒤, 통상우편물은 2*kg*, 소포우편물은 20*kg*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통상은 2 초과, 소포는 20 초과가 선택적 우편역무의 중량 기준이다.

NoteBase

문 3. 내용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④ 내용문을 정정한 경우 '정정' 글자를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한하여 서명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내용증명의 작성 방식과 효력, 배달증명과의 구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사실과 내용문서의 정정 방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이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내용증명 문서는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계산할 때 양면에 기재한 문서는 2매로 본다.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는 아니다.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문자를 고칠 때에는 정정·삽입·삭제의 구분과 글자 수를 난외 또는 말미 여백에 적고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양면에 기재한 경우 수수료 계산에서는 2매로 본다.

② X
-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일 뿐, 발송 사실만으로 언제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효과는 문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틀린 표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올바른 표현: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며,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법률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③ X
-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알리는 것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배달증명이다.
- 틀린 표현: '내용증명'
- 올바른 표현: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④ X
- 정정할 때에는 '정정'이라는 표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정정한 글자 수도 적어야 하며,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할 수 있다. 서명은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는 예외가 아니다.
- 틀린 표현: '정정 글자만 쓰고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며, 외국인만 서명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정정의 문자와 글자 수를 난외 또는 말미 여백에 적고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발송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 발생'이라는 표현과 ③의 내용증명·배달증명 바꿔치기가 핵심 함정이다.
④에서는 정정한 글자 수를 적어야 한다는 점과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서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증명하면 내용증명,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하면 배달증명으로 판단한다. 내용증명 문서의 정정 문제에서는 정정 등의 구분과 글자 수 기재, 도장·지장 또는 서명의 선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내용증명은 내용·발송, 배달증명은 배달일·수취인이다. 양면은 가능하되 수수료상 2매이고, 정정은 글자 수와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NoteBase

문 4.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인터넷우표는 반드시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한다.
ㄴ. 민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ㄷ. 우체국축하카드는 배달증명, 내용증명, 상품권 동봉서비스, 예약배달 서비스의 취급이 가능하다.
ㄹ. 모사전송 우편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는 내용문 최초 1매 500원, 추가 1매 당 200원이며, 복사비는 무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인터넷우표, 민원우편, 우체국축하카드, 모사전송FAX우편의 이용 조건과 부가서비스·수수료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터넷우표: 인터넷에서 우편요금을 결제하고 우표를 출력하는 서비스로, 발송에 필요한 수취인 주소를 입력한다.
민원우편: 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가 발급하는 민원서류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대상을 우체국을 통해 신청·배달받는 서비스이다.
우체국축하카드: 축하·애도의 메시지를 카드에 담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이며, 문화상품권은 정해진 한도에서 동봉할 수 있다.
모사전송FAX우편: 우체국을 통해 팩스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전송 수수료와 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의 복사비를 구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 ㄴ은 모두 옳다. 인터넷우표에는 수취인 주소가 필요하고, 민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취급하므로 옳은 조합은 ㄱ, ㄴ이다.
② X — ㄷ을 옳은 설명으로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우체국축하카드에는 문화상품권 동봉이 가능하지만, 배달증명과 내용증명까지 모두 축하카드의 취급 서비스인 것은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ㄹ을 옳은 설명으로 포함하고 ㄱ을 제외한 부분이 틀렸다. 모사전송FAX우편은 최초 1매 500원, 추가 1매마다 200원이며, 우체국 복사기를 이용하면 복사비가 1매당 50원 부과된다. 따라서 복사비가 무료라는 표현은 '복사비는 1매당 50원이다'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ㄷ과 ㄹ을 모두 옳다고 본 부분이 틀렸다. ㄷ은 배달증명·내용증명까지 취급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ㄹ은 복사비가 무료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오답 포인트

ㄹ의 '복사비는 무료이다'가 핵심 함정이다. 최초 1매 500원과 추가 1매당 200원은 전송 수수료이고, 우체국 복사기를 이용할 때에는 별도로 1매당 50원의 복사비가 붙는다. 또한 ㄷ은 상품권 동봉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보고 배달증명·내용증명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문장을 먼저 독립적으로 판정한 뒤 조합한다. 서비스의 기본 이용 조건, 취급 가능한 부가서비스, 전송 수수료와 복사비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누면 ㄱ·ㄴ은 O, ㄷ·ㄹ은 X가 된다.

암기 포인트

인터넷우표는 수취인 주소, 민원우편은 고시 민원서류, FAX우편은 500원·추가 200원·복사 50원이다.

NoteBase

문 5. 국내 우편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요금별납은 우편요금이 같고 동일인이 한번에 발송하는 우편물로 최소 접수 통수에는 제한이 없다.

② 우편요금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되 연체료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요금수취인부담의 취급 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부가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요금후납은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국내 우편요금의 별납·후납·수취인부담과 체납 요금의 처리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각 제도의 이용 요건, 담보금액, 납부기한 및 연체료 부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별납은 여러 우편물의 요금을 우편물마다 우표로 내지 않고 한꺼번에 따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요금후납은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의 우편요금을 나중에 모아 납부하는 제도이다.
요금수취인부담은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 우편요금 등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금별납은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을 원칙으로 한다. 「우편법」상 체납 요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연체료도 가산한다. 요금후납의 담보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분 우편요금 개산액의 2배 이상이고, 해당 월의 요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요금별납 통상우편물에는 최소 접수 통수 요건이 있다.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10통 이상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 최소 접수 통수에는 제한이 없다.
올바른 표현: 요금별납은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X
체납 금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체납 요금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틀린 표현: 연체료는 가산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체납 요금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O
요금수취인부담의 취급 대상은 통상우편물, 등기소포우편물, 계약등기이며, 각 우편물에 허용되는 부가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다.

④ X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담보금액이 잘못되었다. 원칙적인 담보금은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요금액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 1개월분 우편요금 개산액의 2배 이상이다.
틀린 표현: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한다.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1개월분 우편요금 개산액의 2배 이상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최소 통수 제한 없음', ②의 '연체료 미가산', ④의 '1개월분과 같은 담보금'이 함정이다. 특히 ④는 납부기한은 맞고 담보금의 배수만 틀린 복합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요금 제도 문제에서는 제도별로 대상 우편물, 최소 통수, 납부 시점, 담보금 배수, 연체료 여부를 분리하여 확인한다. 한 선지에 두 사실이 결합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틀려도 전체를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별납은 원칙적으로 10통 이상, 체납은 연체료 가산, 후납 담보는 1개월분의 2배 이상, 납부는 다음 달 20일까지이다.

NoteBase

문 6.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동일한 건물 내에 다수의 수취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③ 특별송달, 보험통상은 수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인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

④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 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물의 원칙적인 배달 상대방, 관리인에 대한 배달 특례,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의 허용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적인 등기우편물과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특별송달·보험등기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무인우편물보관함 = 수취인 또는 동의받은 사람만 우편물을 꺼낼 수 있고, 우편물 보관·배달을 확인할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수취인이 2명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배달하고, 일정한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 등에 배달한 경우에는 장치가 제공하는 배달확인 증명자료로 수령사실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라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갈 우편물은 그곳의 관리사무소·접수처·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다만 우편업무 규정 제37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송달·보험등기 등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우편물은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수취인이 2명 이상인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공동수취인 모두에게 각각 배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O —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배달 특례에 따라 그 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접수처·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③ X — 특별송달과 보험등기는 수취인의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수취인이 요청하더라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틀린 표현: '수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특별송달·보험등기 등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우편물은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

④ O —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이 허용되는 등기우편물은 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 증명자료로 수령사실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송달·보험등기처럼 직접 수령을 확인해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수취인의 요청'만 보고 모든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요청 여부보다 우편물의 성격이 우선하며, 특별송달·보험등기는 직접 수령을 확인해야 하므로 보관함 배달 대상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동수취인·동일건축물 관리인에 관한 배달 특례인지 확인하고, 무인우편물보관함 선지는 '배달확인 증명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일반 등기'인지 '직접 수령을 확인해야 하는 특별송달·보험등기'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공동수취인은 1인 배달, 동일건축물은 관리인 배달 가능, 특별송달·보험등기는 무인보관함 배달 불가이다.

NoteBase

문 7. 국제 통상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서간은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②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는 인쇄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③ 소형포장물에는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동봉할 수 없다.

④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요금과 내용품 취급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항공서간, 인쇄물, 소형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항공서간은 한 장의 종이를 접어 편지지와 봉투를 겸하도록 만든 항공통상우편물이다.
소형포장물은 2kg 이하의 작고 가벼운 물품을 보내는 국제통상우편물이다.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점자 서장·점자 자료나 공인 기관이 주고받는 시각장애인 전용 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국제통상우편 안내에 따르면 항공서간은 세계 어느 지역이나 같은 요금으로 보낼 수 있다.
인쇄물은 일정한 인쇄·복사물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 등도 예외적으로 인쇄물로 취급한다. 소형포장물에는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적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넣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요금이 면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항공서간은 목적지가 어느 지역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일요금이 적용되므로 옳다.

② X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는 일반적인 인쇄물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인쇄물로 취급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인쇄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서한 악보는 인쇄물로 취급한다.'

③ X
소형포장물에는 개인적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무조건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소형포장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의 서류 등 허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봉할 수 있다.
틀린 표현: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를 동봉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허용 요건을 갖춘 개인적 통신문 성격의 서류는 소형포장물에 동봉할 수 있다.'

④ X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모든 요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요금이 면제된다. 항공으로 보내면 항공부가요금은 내야 한다.
틀린 표현: '항공부가요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올바른 표현: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원고'와 '필서'라는 말만 보고 인쇄물이 아니라고 단정하게 만들고, ③은 인쇄물·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의 통신문 제한을 소형포장물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만든다. ④의 함정은 '모든 요금'이라는 절대 표현으로 항공부가요금의 예외를 숨긴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물 종류마다 요금과 내용품 기준을 따로 대응시킨다. 항공서간은 지역별 요금 차이가 있는지, 인쇄물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원고인지, 소형포장물은 동봉 서류의 허용 요건이 있는지,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이 제외되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항공서간은 세계 단일요금, 원고·필서 악보는 인쇄물, 소형포장물은 통신문 조건부 허용, 시각장애인용 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만 예외이다.

NoteBase

문 8. K-Pack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월 최소 계약물량은 제한이 있다.
ㄴ. 요금은 EMS보다 저렴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감액 제도가 있다.
ㄷ. 해외로 발송하는 2kg 이하 소형물품을 e-Shipping으로 접수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 서비스이다.
ㄹ. 'R'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취인의 서명 없이 배달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Packet의 계약물량, 요금, 이용 대상, 배달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핵심 개념

K-Packet: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2*kg* 이하 소형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국제우편서비스이다.
계약물량: K-Packet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용자는 계약할 수 있으므로 월 최소 계약물량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방문접수 제공 여부나 요금감액은 월 발송물량 또는 이용금액과 관련될 수 있다.
요금: 소형포장물과 EMS의 중간 수준으로 EMS보다 저렴하며, 월간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감액 제도가 있다.
우편물번호: R 계열은 등기 취급인 K-Packet(Regular), L 계열은 추적은 가능하지만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하는 K-Packet(Light)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월 최소 계약물량에 제한이 있다고 하므로 틀리고, ㄷ은 전자상거래 소형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므로 맞다. 틀린 조합 'ㄱ, ㄷ'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ㄱ은 월 최소 계약물량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틀리고, ㄹ은 무서명 배달에 사용하는 번호의 첫 글자를 R로 제시하여 틀리다. 틀린 조합 'ㄱ, ㄹ'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ㄴ은 K-Packet 요금이 EMS보다 저렴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요금감액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맞다. ㄷ도 해외로 발송하는 2*kg* 이하 전자상거래 소형물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국제우편서비스라는 점에서 맞다. 따라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④ X
ㄴ은 맞지만 ㄹ의 'R'이 틀리다. R로 시작하는 K-Packet(Regular)은 등기 취급으로 수취인 서명을 받으며,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하는 방식은 L로 시작하는 K-Packet(Light)에 해당한다. 틀린 조합 'ㄴ, ㄹ'은 'ㄴ,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계약 가능 요건'과 '방문접수·요금감액 요건'을 혼동하기 쉽다. 또한 ㄹ에서는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무서명 배달이라는 특징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번호 첫 글자는 R이 아니라 L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K-Packet 문항에서는 먼저 대상 물품이 전자상거래용 2*kg* 이하 소형물품인지 확인하고, 계약 자체의 최소물량과 방문접수·요금감액 조건을 분리한다. 번호와 배달 방식은 R 계열의 등기·서명 배달과 L 계열의 추적·무서명 배달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K-Packet은 2*kg* 이하 전자상거래 소형물품, EMS보다 저렴, 실적 감액이다. R은 Regular·서명, L은 Light·무서명이다.

NoteBase

문 9. IBRS(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 E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②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통 당 요금은 5,000원이다.

③ 접수 중량은 최대 2kg까지이며, 일본에만 발송이 가능하다.

④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이용하는 국제우편 상품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IBRS EMS의 요금 부담 주체, 이용 목적, 중량 한도, 취급 지역 및 수수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BRS EMS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이용하는 국제우편 서비스이다.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며,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을 일본으로 보낼 때 이용한다. 취급수수료는 통당 10,00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IBRS는 International Business Reply Service의 약자로, 우편요금을 발송인이 아니라 수취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통당 요금은 5,000원'이다. 실제 IBRS EMS 취급수수료는 통당 10,000원이다.
③ O — 접수 가능한 물품은 최대 2*kg* 이하의 소형 물품이며, 취급 지역은 일본이다.
④ O —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할 때 이용하는 국제우편 상품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5,000원은 EMS 방문접수 수수료의 최대액과 혼동하기 쉬운 금액이다. IBRS EMS 자체의 취급수수료는 통당 10,000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BRS EMS 문항에서는 '수취인 부담·해외 구매품 반품·2*kg* 이하·일본·통당 10,000원'을 차례로 대조한다. 이 중 하나라도 다른 선지를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IBRS EMS는 수취인 부담, 일본 반품, 2kg 이하, 통당 10,000원이다.

NoteBase

문 10. 예금의 입금과 지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부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반드시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금융기관은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한 때에 한하여 예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송금인의 단순착오로 인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된 경우, 언제든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을 발행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의 입금·지급 과정에서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범위, 금융기관이 예금채무를 면하는 경우, 착오송금의 반환 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통장이나 이체 기록 자체가 아니라 실제 입금액, 예금채권의 귀속 주체, 정당한 반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기한부예금 = 만기를 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 맡기는 예금이다.
착오송금 =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액만큼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없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자진 반환에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한다. 또한 예금계약은 실제로 금융기관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하므로 통장에 잘못 적힌 초과 금액까지 예금채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기한부예금의 중도해지는 약정한 만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은 예금주 본인의 해지 의사 또는 그 의사에 기초한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금주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O
- 예금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예금주이므로 금융기관이 정당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예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상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X
-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해 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언제든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서 송금액을 임의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틀린 표현: "언제든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착오송금액은 먼저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자진 반환받고,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

④ O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성립한다. 통장에 실제 입금액보다 큰 금액이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초과액에 관한 예금계약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송금인이 착오송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과 금융기관이 수취인 계좌의 예금채권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같다고 보는 데 있다.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도 수취인의 동의나 적법한 강제 절차 없이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착오송금 문제에서는 먼저 이체 완료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한다. 성립했다면 송금인의 권리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실제 회수 방법은 수취인의 자진 반환 또는 지급명령·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 통장 기재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르면 예금계약의 범위는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착오송금은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임의 회수는 불가능하고, 예금액은 통장 표시가 아니라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문 11. 보험계약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고지의무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ㄴ. 고지의무는 청약 시에 이행하고, 부활 청약 시에는 면제된다.
ㄷ.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ㄹ.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고지의무자와 이행 시기,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기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자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일 뿐,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핵심 구분

현행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보험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활 청약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포함된 청약서를 사용하므로 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보험수익자를 고지의무자에 포함하여 틀리고, ㄴ은 부활 청약 시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틀리다.
- 틀린 표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부활 청약 시에는 면제된다'
- 올바른 표현: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부활 청약 시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X
- ㄷ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 묶은 조합이 아니다.
- 틀린 표현: ㄱ의 '보험수익자'
- 올바른 표현: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③ X
-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 묶은 조합이 아니다.
- 틀린 표현: ㄴ의 '부활 청약 시에는 면제된다'
- 올바른 표현: 고지의무는 최초 청약 시뿐 아니라 부활 청약 시에도 이행한다.

④ O
- ㄷ은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 ㄹ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옳다. 따라서 ㄷ과 ㄹ을 묶은 ④가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보험수익자까지 고지의무자라고 오인하기 쉽고, ㄴ에서는 부활을 단순한 기존 계약의 재개로 보아 고지의무가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또한 ㄷ의 1개월은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이고, ㄹ의 인과관계 부존재는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예외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지의무 문제에서는 먼저 의무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다음으로 최초 청약과 부활 청약 모두에서 고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해지기간은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며,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남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지의무자는 계약자·피보험자, 부활 때도 고지, 안 날부터 1개월,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다.

NoteBase

문 12. 우체국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은 1종(일반가입)과 2종(간편가입)을 중복 가입할 수 없다.

②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장애인 부모의 부양능력 약화 위험 및 장애아동을 고려하여 15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③ 무배당 우체국든든한종신보험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2천만 원 이상 가입할 경우,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④ 무배당 우체국여성암보험(갱신형)은 가입 후 매 2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유방검진비용 10만 원을 지급한다.(주계약 1구좌 기준)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 보험상품별 가입 제한,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할인 범위, 검진비 지급액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종(일반가입)은 일반적인 계약심사를 거치는 유형이고, 2종(간편가입)은 고지 항목을 간소화한 유형이다.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장애인을 위한 연금보험으로, 문항의 기준에서는 연금개시나이가 20세부터이다.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은 할인 대상이 주계약 보험료인지 특약보험료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의 1종(일반가입)과 2종(간편가입)은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② X
- 장애인 부모의 부양능력 약화 위험과 장애아동을 고려하여 연금수급이 가능한 나이는 15세가 아니라 20세부터이다.
- 틀린 표현: 15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 올바른 표현: 20세부터 연금수급이 가능하다.

③ X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액계약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에 적용되며 특약보험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틀린 표현: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주계약 보험료만 할인받을 수 있고 특약보험료는 제외된다.

④ X
- 무배당 우체국여성암보험(갱신형)은 가입 후 매 2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주계약 1구좌 기준 유방검진비용 20만 원을 지급한다.
- 틀린 표현: 유방검진비용 10만 원을 지급한다.
- 올바른 표현: 유방검진비용 20만 원을 지급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15세’와 실제 연금개시나이 20세, ③의 할인 범위에 특약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현, ④의 10만 원과 실제 지급액 20만 원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상품 선지는 가입 가능 여부, 개시나이, 할인 대상, 지급액을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특히 금액과 나이뿐 아니라 ‘주계약만’인지 ‘특약까지’인지 범위 표현을 함께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속정기 1종·2종 중복 불가, 어깨동무연금 20세, 고액할인은 주계약만, 여성암 검진비 20만 원이다.

NoteBase

문 13. 우체국 해외송금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머니그램(MoneyGram) 해외송금은 수취인의 계좌번호 없이 당발송금이 가능하다.

② 유로지로(Eurogiro) 해외송금의 당발송금 한도는 건당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③ SWIFT와 유로지로(Eurogiro)의 타발송금 한도는 1일 기준으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④ SWIFT 망을 통해 해외은행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건당 미화 3천 달러 상당액 이하이고, 외국인은 송금을 할 수 없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해외송금 서비스인 MoneyGram, Eurogiro, SWIFT의 송금 방식, 송금 한도, 이용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oneyGram: 수취인의 은행계좌 없이 송금번호와 수취인 영문명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특급송금 서비스이다.
Eurogiro: 유로지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송금 서비스로, 문항의 출제 기준상 당발송금 한도는 건당 미화 3,000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SWIFT: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해외은행 계좌로 보내는 계좌송금 서비스이다.
당발송금은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이고, 타발송금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받는 송금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MoneyGram은 무계좌 방식이므로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없어도 송금할 수 있고, 송금 후 약 10분 뒤 수취가 가능한 특급송금 서비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당발송금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건당 미화 5,000달러'이다. 문항의 출제 기준상 Eurogiro 당발송금 한도는 건당 미화 3,000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1일 기준 미화 50,000달러'이다. 문항의 출제 기준상 SWIFT와 Eurogiro의 타발송금 한도는 1일 기준 미화 20,000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건당 미화 3,000달러'와 '외국인은 송금을 할 수 없다'이다. 문항의 출제 기준상 SWIFT 당발송금 한도는 송금인 1명 기준 연간 미화 50,000달러 상당액 이하이며,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와 외국인도 송금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Eurogiro의 실제 한도 3,000달러를 5,000달러로 바꾸었고, ③은 타발송금의 1일 한도 20,000달러를 50,000달러로 바꾸었다. ④는 Eurogiro의 건당 한도와 SWIFT의 한도를 섞고 외국인의 이용 가능 여부까지 반대로 제시한 복합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MoneyGram은 무계좌 특급송금, SWIFT는 해외은행 계좌송금, Eurogiro는 계좌·주소지 송금이라는 방식을 구분한다. 다음으로 당발은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거래, 타발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받는 거래라는 방향을 확인한 뒤 각 한도와 이용 대상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MoneyGram은 무계좌·약 10분, Eurogiro 당발은 건당 3,000달러, SWIFT·Eurogiro 타발은 1일 20,000달러, SWIFT는 외국인도 가능이다.

NoteBase

문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ㄱ.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다.
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진다.
ㄷ. 보험계약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된다.

	ㄱ	ㄴ	ㄷ
①	위험계약성	쌍무계약성	부합계약성
②	사행계약성	계속계약성	부합계약성
③	위험계약성	계속계약성	상행위성
④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상행위성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 계속계약성, 부합계약성을 각 설명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계약관계의 지속성, 약관에 의한 내용의 정형화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행계약성 =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확정되는 성질이다.
계속계약성 = 계약의 효력이 일정 기간 계속되고 그동안 당사자의 의무도 이어지는 성질이다.
부합계약성 = 보험자가 미리 정한 약관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여 계약 내용이 정해지는 성질이다.

핵심 구분

ㄱ은 불확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구체화되므로 사행계약성이다. 현행 상법도 보험계약을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한다. ㄴ은 보험료 납부 후에도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 등 계약관계상의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계속계약성이다. ㄷ은 보험의 기술성·단체성 때문에 다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할 약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합계약성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위험계약성, ㄴ을 쌍무계약성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ㄱ의 '우연한 사고 발생에 의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는 설명은 사행계약성이고, ㄴ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통지의무 등이 계속된다'는 설명은 계속계약성이다. ㄷ의 부합계약성 연결은 옳다.
틀린 표현: ㄱ 위험계약성, ㄴ 쌍무계약성
올바른 표현: ㄱ 사행계약성, ㄴ 계속계약성

② O
ㄱ의 우연성은 사행계약성, ㄴ의 지속되는 의무는 계속계약성, ㄷ의 정형화된 계약 내용은 부합계약성을 뜻한다. 세 연결이 모두 옳다.

③ X
ㄱ과 ㄷ의 연결이 틀렸다. ㄱ은 우연한 사고가 보험자의 급부의무를 좌우하므로 사행계약성이고, ㄷ은 약관을 통한 계약 내용의 정형화를 설명하므로 부합계약성이다. ㄴ의 계속계약성 연결은 옳다.
틀린 표현: ㄱ 위험계약성, ㄷ 상행위성
올바른 표현: ㄱ 사행계약성, ㄷ 부합계약성

④ X
ㄴ과 ㄷ의 연결이 틀렸다. ㄴ은 계약기간 중 통지의무 등이 계속된다는 뜻이므로 계속계약성이고, ㄷ은 미리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성이다. ㄱ의 사행계약성 연결은 옳다.
틀린 표현: ㄴ 쌍무계약성, ㄷ 상행위성
올바른 표현: ㄴ 계속계약성, ㄷ 부합계약성

오답 포인트

ㄱ의 '우연한 사고'를 보고 막연히 위험계약성으로 고르거나, ㄴ에 계약자와 보험자의 의무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쌍무계약성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위험의 존재나 의무의 상호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가 급부를 좌우한다'는 점과 '의무가 시간적으로 계속된다'는 점을 묻는다. ㄷ의 '정형성'은 상행위성보다 약관에 부합한다는 부합계약성의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불확정한 사고가 급부를 좌우한다'는 사행계약성, '계약기간 동안 의무가 이어진다'는 계속계약성, '미리 만든 약관으로 내용이 정해진다'는 부합계약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연한 사고는 사행, 지속되는 의무는 계속, 정형화된 약관은 부합이다.

NoteBase

문 15.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버우대정기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다.

② 우체국국민연금안심통장과 우체국생활든든통장은 압류금지 전용 통장이다.

③ 우체국Smart퍼즐적금의 목표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고, 저축 한도는 제한이 없다.

④ 우체국Young利한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예금상품별 가입금액, 압류금지 여부, 저축한도, 가입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버우대정기예금은 만 50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위한 거치식 예금이며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우체국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압류금지 전용통장이다. 반면 우체국생활든든통장은 만 50세 이상 고객에게 금리·수수료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생활금융 통장이지 압류금지 전용통장은 아니다.
우체국Smart퍼즐적금은 목표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정하지만 저축한도도 별도로 정해진 상품이다.
우체국Young利한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층 특화 통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실버우대정기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두 통장을 모두 '압류금지 전용 통장'이라고 한 부분이다. 우체국국민연금안심통장은 압류금지 전용통장이지만, 우체국생활든든통장은 만 50세 이상 고객을 위한 생활금융 우대통장이다.
③ X — '저축 한도는 제한이 없다'가 틀렸다. 목표금액은 100만원 이상이지만, 저축한도는 1인당 매 분기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④ O — 우체국Young利한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실명 개인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생활든든'이라는 명칭 때문에 압류방지 기능까지 있다고 오해하기 쉽고, ③은 목표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과 저축한도 자체의 존재를 혼동하게 만든다. 상품명보다 가입금액·보호기능·한도·연령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 설명 문제에서는 각 선지를 가입대상, 가입금액, 입금·저축한도, 법적 보호기능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특히 ‘압류금지 전용’과 ‘우대통장’, ‘목표금액’과 ‘저축한도’를 서로 다른 조건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실버 최저 1,000만원, 국민연금안심은 압류금지, Smart퍼즐은 분기 한도, Young利한은 18세부터 35세까지이다.

NoteBase

문 16.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이다.

② 채권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수익률은 내려간다.

③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④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 표면금리와 실효금리,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목금리는 계약이나 시장에서 겉으로 표시되는 금리이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금리이다. 따라서 명목금리는 대체로 실질금리에 기대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으로 본다.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표면금리는 계약서 등에 표시된 금리이고, 실효금리는 복리 주기 등 실제 효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받거나 부담하는 금리이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원금과 이미 붙은 이자를 합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명목금리는 대체로 실질금리에 기대물가상승률을 더한 금리이다. 반대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로 본다.
② O - 채권이 지급하는 이자와 만기상환액이 같다면 채권가격이 내려갈수록 같은 현금흐름을 더 싼 가격에 얻으므로 채권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수익률은 내려간다.
③ O - 표면금리는 계약상 겉으로 표시된 금리이고, 실효금리는 복리 주기 등 실제 금융 효과를 반영하여 실제로 받거나 부담하는 금리이다.
④ O - 단리는 매 기간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앞서 발생한 이자에도 다시 이자를 계산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관계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하는 방향과 빼는 방향을 뒤바꾼 선지이다. '명목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 실질에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명목'이라는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문두의 '옳지 않은'을 확인한 뒤, 명목·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의 가감 방향, 채권가격·수익률은 역관계, 단리·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명목은 실질에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채권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며,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NoteBase

문 17. 보장성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②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보장성 보험료를 산출할 때에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이 필요하다.

④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보장성보험의 의미, 보험료 산출 요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험상품의 성격과 세법상 공제 대상자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장성보험 = 사망·상해·질병 등 위험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보험으로, 만기 생존 시 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주계약 = 독립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본 계약이다.
특약 = 주계약에 덧붙여 보장 내용이나 편의를 추가하는 계약이다.

핵심 구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이 보장성 요건을 갖추는지와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이 공제의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장성보험은 만기 생존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세액공제 여부는 주계약인지 특약인지라는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계약뿐 아니라 특약 부분도 보장성보험의 요건을 갖추고 공제 대상 보험료로 납입되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O
보험료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반영하는 예정위험률, 보험료 운용수익을 반영하는 예정이율, 계약 체결·유지 등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는 예정사업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한다.

④ X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올바른 표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오답 포인트

④의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와 같은 공제 대상이라고 본 것이 함정이다.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사실과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자의 범위는 별개의 요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장성보험 문항에서는 먼저 만기 생존급부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세액공제 문항에서는 공제 대상 보험료인지와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보장성은 만기 생존급부가 납입보험료 이하,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최초 계약 가입 나이는 0 ~ 60세
- 보험기간은 10년 만기(종신갱신형)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으로 3대 질병 진단(최대 3,000만 원), 중증 수술(최대 500만 원) 및 중증 장해(최대 5,000만 원)시 치료비 보장
- 10대 성인 질환 보장
-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①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

②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③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④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보험의 보장 방식과 급부 구성을 보고 해당 우체국보험 상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은 보기처럼 3대 질병 진단, 중증 수술, 중증 장해, 10대 성인질환을 보장하고 10년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는 건강보장형 상품이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약정 범위에서 보상하는 상품이고, 간편가입건강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 건강보험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은 상품명이 비슷하지만, 보기에서 제시한 3대 질병 진단·중증 수술·중증 장해 보장과 10대 성인질환 보장, 건강관리자금 지급을 한데 묶은 상품명이 아니다. 틀린 상품명은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이며, 올바르게는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이다.

② X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약정 범위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다. 보기의 정액 진단·수술·장해 보장과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상품이 아니다. 틀린 상품명은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이며, 올바르게는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이다.

③ O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은 최초 가입 나이 0~60세, 10년 만기 갱신형, 3대 질병 진단·중증 수술·중증 장해 치료비, 10대 성인질환 보장 및 10년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 지급이라는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④ X
무배당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은 간소화된 가입 절차가 핵심인 건강보험으로, 보기에 열거된 보장과 건강관리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아니다. 틀린 상품명은 '우체국간편가입건강보험'이며, 올바르게는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큰병큰보장'과 ③의 '건강클리닉'이 모두 질병 보장을 연상시키는 점이 함정이다. 질병 진단금만 보지 않고 10대 성인질환 보장과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 지급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 문제에서는 보장 방식부터 구분한다. 실제 의료비 보상이면 실손의료비보험, 간소화된 심사가 강조되면 간편가입보험, 여러 성인질환의 정액 보장과 건강관리자금이 함께 제시되면 건강클리닉보험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건강클리닉보험은 3대 질병·중증 수술·중증 장해·10대 성인질환 보장에 건강관리자금까지 결합한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_____ is probably the best understood of the mental pollutants. From the dull roar of rush-hour traffic to the drone of the fridge to the buzz coming out of the computer, it is perpetually seeping into our mental environment. Trying to make sense of the world above the din of our wired world is like living next to a freeway—we get used to it, but at a much diminished level of mindfulness and wellbeing. Quiet feels foreign now, but quiet may be just what we need. Quiet may be to a healthy mind what clean air and water and a chemical-free diet are to a healthy body. It is no longer easy to manufacture quietude, nor is it always practical to do so. But there are ways to pick up the trash in our mindscape: Switch off the TV set in the dentist's waiting room. Lose that loud fridge. Turn off the stereo. Put the computer under the table.

① Stimulus ② Music ③ Noise ④ Dus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복되는 소리의 예와 고요함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문맥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핵심 명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Noise는 원하지 않거나 불쾌한 소음이다. 지문은 출퇴근길 교통의 굉음, 냉장고의 웅웅거림, 컴퓨터의 윙윙거림을 정신을 오염시키는 대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줄여 quiet를 되찾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Noise가 들어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Stimulus는 '자극'이라는 넓은 뜻이지만, 지문에 열거된 roar, drone, buzz와 반대 개념인 quiet는 모두 소리에 관한 단서이다. 틀린 표현은 Stimulus이며, 올바르게는 Noise이다.
② X — Music은 '음악'이지만, 지문은 음악이 아니라 교통·냉장고·컴퓨터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쾌한 소리를 다룬다. 틀린 표현은 Music이며, 올바르게는 Noise이다.
③ O — Noise는 '소음'이다. rush-hour traffic의 roar, fridge의 drone, computer의 buzz가 정신 환경에 스며드는 오염물질이라는 설명과 정확히 맞는다.
④ X — Dust는 '먼지'이지만, 지문의 구체적 사례는 눈에 보이는 먼지가 아니라 계속 들리는 소리이다. 틀린 표현은 Dust이며, 올바르게는 Noise이다.

오답 포인트

첫 문장의 mental pollutants만 보고 오염과 연관된 Dust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바로 뒤의 roar, drone, buzz와 글 전체에서 반복되는 quiet가 답의 의미 범위를 '소음'으로 한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의 추상적 표현만 보지 않고, 이어지는 구체적 예시와 반복·대조어를 함께 확인한다. 이 지문에서는 소리의 예시인 roar·drone·buzz와 대조어 quiet를 연결하면 Noise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roar·drone·buzz는 Noise, 그 반대는 quiet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o learn to read, children need to be helped to read. This issue is as simple and difficult as that. Dyslexia is a name, not an explanation. Dyslexia means, quite literally, being unable to read. Children who experience difficulty learning to read are frequently called dyslexic, but their difficulty does not arise because they are dyslexic or because they have dyslexia; they are dyslexic because they cannot read. To say that dyslexia is a cause of not being able to read is analogous to saying that lameness is a cause of not being able to walk. We were all dyslexic at one stage of our lives and become dyslexic again whenever we are confronted by something that we cannot read. The cure for dyslexia is to read.

① 어린이들이 글을 읽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
② 난독증은 글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③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시기에 난독 상태를 겪은 바 있다.
④ 독서는 난독증을 치유하는 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난독증을 읽기 어려움의 원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읽지 못하는 상태에 붙인 이름으로 보는지 지문의 핵심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문에서 난독증은 읽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일 뿐, 그 상태를 낳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저자는 이를 절뚝거림이 걷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읽기 어려움은 읽도록 도움을 받고 실제로 읽음으로써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 첫 문장의 '아이들이 읽는 법을 배우려면 읽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난독증은 글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이다. 지문은 난독증이 읽지 못하는 원인이 아니라 읽지 못하는 상태에 붙인 이름이라고 본다. 올바르게는 '난독증은 글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명칭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지문은 우리 모두가 삶의 한 시기에 난독 상태였으며, 읽을 수 없는 것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 난독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④ O — 지문의 마지막 문장인 '난독증의 치료법은 읽는 것이다'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난독증과 읽기 불능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과관계로 바꾼 선지이다. 지문은 '난독증이라서 읽지 못한다'가 아니라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난독증이라고 불린다'고 인과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서 '이름이지 설명이 아니다'와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붙는 명칭이다'라는 대조를 확인한다. 선택지가 상태의 명칭을 상태의 원인으로 바꾸면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난독증은 원인 설명이 아니라 읽지 못하는 상태의 이름이며, 지문이 제시한 치료의 길은 읽기이다.

NoteBase